열린 충남-봄 2006.4.20 2:24 PM 페이지111

CHUNGNAM FORUM

행정중심복합도시, 『충남 도약의 씨앗』심포지엄

- 행정도시 주변지역의 전문화 필요 -
- 홍성 · 예산-청양-부여간 교통망 체계 개선 필요 -
- 행정도시 건설 계기 2030년까지 충남지역 61만 2천명 고용창출 -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지난 3월 23일 오후 2시 공주대학교 대회의실에서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임형재 충남도정무부지사, 유승화 행복도시건설청 차장, 강용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자문위원장, 교수 및 관계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행정중심복합도시, 충남 도약의 씨앗』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개회사, 임형재 道 정무부지사의 심대평 도지사 축사 대독, 유승화 행복도시건설청 차장의 이춘희 행복도시건설청장 축사 대독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順으로 진행됐다.

이날 ▲1주제 발표에 나선 임재영 · 신동호 충남발전연구원 박사는 "행복도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발표를 통하여,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이후 행정도시(12부 4처 2청 18국책연구원)로 축소되었지만, 행정도시를 계기로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생산액은 총 61조 1천억원, 부가가치는 26조 3천억원 증대되며, 충남의 경우는 같은 기간 총 45조의 생산액, 27조의 부가가치, 61만 2천명의 고용증가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2주제 발표에서 이선하 공주대학교 교수는 "행정도시건설과 연계한 충청권 교통체계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행복도시건설과 도청이전에 따른 충남의 종합교통체계를 제시했으며, 특히 도청이전 예정지 결정과 관련하여 도청이전지~청양~부여간 근접성 제고를 위한 교통망 체계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3주제 발표에서 정환영 공주대학교 교수는 "행복도시 주변지역 네트워크 구축방안"의 발표를 통해 주변지역 산업전문화 방안으로 ▷천안시는 영상,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보통신산업으로 ▷공주시는 교육, 문화산업, 관광 · 레저산업, 영상 · 애니메이션 산업, 전원형 주택산업으로 ▷계룡시는 국방 · 방위산업, 전원형 주택산업으로 ▷연기군은 물류산업, 신기술 · 첨단벤처산업, 오락 · 유흥산업으로 전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행복도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행복도시건설과 연계한 충청권 교통체계 발전방향, 행복도시 주변지역 네트워크 구축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대해 ▲김명수 한밭대학교 교수 ▲김성길 공주대학교 교수 ▲이상호 한밭대학교 교수 ▲조판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주제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행복도시 건설이 충남 도약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 행복도시와 충청권 주변지역이 상호 보완적인 분업적인 관계가 요구되며, 무엇보다도 지역의 자연적, 인문적 조건과 지역특화 전략에 따른 주변지역의 전문화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다.

열린 충남-봄 2006.4.20 2:24 PM 페이지 113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임재영 · 신동호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임재영 · 신동호 박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의 파급효과를 생산효과, 부가가치효과, 고용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핵심대안이라고 주장하였다. 발표논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전재한다.

Ⅰ. 지역경제 파급효과

1. 생산효과

정부소비지출 변화에 의한 생산효과는 목표연도인 2030년까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42조 614억원의 생산액 감소효과가 발생되며, 충청남도에서는 총 31조 9,803억원의 생산액 증가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 그리고 기타 지역 모두에서 정부소비지출 수요변화로 인해 정(+)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2030년까지 총 1조 3,188억원의 생산액 감소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이동에 따른 민간소비지출 수요변화에 의한 생산효과는 2030년까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1조 6,036억원의 생산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생산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 총 1조 2,182억원의 생산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는 총 716억원의 생산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수요 변화로 인한 생산효과는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63조 91억원의 생산증가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의 생산효과는 총 26조 5,146억원이며, 기타 지역은 총 20조 2,661억원, 그리고 충청남도는 11조 8,329억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충청남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효과 중 상당부분이 수도권과 기타 지역에서 발생되는 것은 지역간 산업간 연관관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충청남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충청남도 외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중간재(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로 분석되었다.

공공 및 민간소비지출 수요변화와 건설부문의 수요변화를 통해 나타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의 생산효과는 개발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61조 6,187억원의 생산증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충청남도의 생산증가효과는 같은 기간 총 45조 314억원이며, 대전 · 충북 지역은 총 7조 3,174억원으로 분석되었다.

2. 부가가치효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의 부가가치 효과로는 먼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정부소비지출 수요변화에 의한 효과는 2030년까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26조 2,574억원의 부가가치 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충청남도의 부가가치는 같은 기간 총 21조 687억원이 증가하며, 대전 · 충북 지역은 1조 4,091억원의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충청권 전체적으로 총 22조 4,788억원의 부가가치 증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구이동에 수반되는 민간소비지출 수요변화에 의한 부가가치 효과는 2030년까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8,377억원의 부가가치 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같은 기간 충청남도와 대전 · 충북의 부가가치는 각각 총 6,742억원과 728억원이 증가하여, 충청권 전체적으로 7,470억원의 부가가치 증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비를 통해 발생되는 건설부문 수요변화에 의한 부가가치 효과는 생산효과의 경우와 동일하게 건설부문 수요변화에 의한 부가가치 효과 역시 전국적으로 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11조 4,829억원, 기타 지역에서는 7조 9,012억원, 그리고 충청권 전체적으로 6조 9,791억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충청권 중 충청남도의 부가가치 효과는 총 5조 2,6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및 민간소비지출 수요변화와 건설부문의 수요변화를 통해 나타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의 부가가치 효과를 종합하면 이 개발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26조 3,632억원의 부가가치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충청남도의 부가가치 효과는 같은 기간 총 27조 69억원이며, 대전 · 충북 지역은 총 3조 1,970원으로, 충청권 전체의 부가가치 증가효과는 총 30조 2,039억원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같은 기간 수도권 지

열린 충남-봄 2006.4.20 2:24 PM 페이지115

역의 부가가치는 총 15조 6,122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고용효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정부소비지출 수요변화에 의한 고용효과는 2030년까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6,280백명의 고용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충청남도의 고용은 같은 기간 총 3,934백명이 증가하며, 대전 · 충북 지역은 261백명이 증가하여, 충청권 전체적으로 총 4,194백명의 고용증가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외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총 1,117백명의 고용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적으로 정부지출 수요변화에 의해 총 969백명의 고용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이동에 수반되는 민간소비지출 수요변화에 의한 고용효과는 2030년까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214백명의 고용 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같은 기간 충청남도와 대전 · 충북의 고용은 각각 총 221백명과 13백명이 증가하여, 충청권 전체적으로 총 234백명의 고용 증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기타 지역의 고용은 같은 기간 총 42백명이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총 62백명의 고용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부문 수요변화에 의한 고용효과는 전국적으로 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총 2,759백명, 기타 지역에서는 1,291백명, 그리고 충청권 전체적으로 2,229백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충청권 중 충청남도의 고용증가 효과는 총 1,969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5,372백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충청남도의 고용효과는 같은 기간 총 6,123백명이며, 대전 · 충북 지역은 총 533백명으로, 충청권 전체의 고용증가 효과는 총 6,657백명인 것으로 분석된 반면 수도권 지역은 이 기간 총 3,735백명의 고용감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Ⅱ. 결 론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은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생산액을 총 61조 6,187억원, 부가가치를 26조 3,632억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고용은 같은 기간 총 5,372백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이 사업을 통해 수도권을 제외한 충청권,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 정(+)의 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입지하게 되는 충청남도의 경우 같은 기간 총 45조 314억원의 생산증가와 27조 69억원의 부가가치 증가, 그리고 6,123백명의 고용증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 반면 수도권 지역에서는 생산, 부가가치, 그리고 고용 모두에서 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건설효과가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에 기인한 것이다. 즉,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로 인해 기존 수도권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공공부문의 행정서비스 제공기능이 충청남도로 이전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사업을 위해 투여되는 개발사업비는 모든 지역에서 공히 정(+)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적으로 정(+)의 효과를 발생시키며, 특히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에 상대적으로 큰 경제성장 효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핵심대안으로 제시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은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 파급효과 분석결과 종합(2000년 불변가격)

구분			생산효과(억원)	부가가치효과(억원)	고용효과(백명)
공공기관 이전효과 (A)	수도권		-436,650	-270,951	-6,494
	충청권	충청남도	331,985	217,429	4,154
		대전 · 충북	29,219	14,819	273
		(소계)	361,203	232,248	4,428
	기타		61,543	38,703	1,159
	전국 계		-13,904	-	-907
건설효과 (B)	수도권		265,146	114,829	2,759
	충청권	충청남도	118,329	52,640	1,969
		대전 · 충북	43,955	17,151	260
		(소계)	162,284	69,791	2,229
	기타		202,661	79,012	1,291
	전국 계		630,091	263,632	6,279
효과종합 (A+B)	수도권		-171,504	-156,122	-3,735
	충청권	충청남도	450,314	270,069	6,123
		대전 · 충북	73,174	31,970	533
		(소계)	523,488	302,039	6,657
	기타		264,203	117,716	2,450
	전국 계		616,187	263,632	5,372

열린 충남-봄 2006.4.20 2:24 PM 페이지117

행정도시건설과 연계한 충청권 교통체계 발전방향

이선하 | 공주대학교 교수

이선하 교수는 광역교통망, 지역간선도로망, 철도망 구축방안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이들 사업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비롯한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발표논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전재한다.

Ⅰ. 광역교통망 구축방안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연계성 강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충남도내 남북3축과 동서3축 및 X축이 교차하는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구축하고, 기존 경부고속도로를 포함한 [서해안고속도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남북지역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당진-울진] 자동차전용도로, [보령-공주] 고속도로, [서천-논산-대전] 고속화도로 건설로 주요 항만과 내륙 거점을 연결, 서해안지역과 내륙지역의 연계발전을 주도할 X축의 [당진-대전], [서천-공주]고속도로를 신설하는 것이다.

표 1. 축별 광역교통망의 노선명 및 주요경유지

구 분	노 선 명	주 요 경 유 지
남북축	서해안고속도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경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당진, 서산, 홍성, 보령, 서천 천안, 공주, 논산 천안, 연기, 대전, 금산
동서축	[당진-울진]간 자동차전용도로 [보령-공주]간 고속도로 [서천-대전]간 고속화도로	태안, 서산, 당진, 아산, 천안 보령, 청양, 공주 서천, 논산, 대전
X 축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당진, 예산, 공주, 대전 서천, 부여, 공주

Ⅱ. 지역간선도로망 구축방안

지역간선도로망의 이용효율 극대화 및 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국도 13개 노선, 국가지원지방도 5개 노선, 일반지방도 36개 노선에 대하여 노선 연장 및 확 포장사업 추진하고 공주, 보령, 아산, 천안, 서산, 논산 등의 시급도시 및 주요 읍 면급 도시들의 도시교통 체증해소를 위하여 20개 구간의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서해안관광산업도로 건설과 연계하여 [보령~안면도] 및 [서산 대산~태안 이원]간 연육교를 가설하고, 금강변산업관광도로 등의 조기 건설로 산업 관광부문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그림 1. 일반도로확충 계획도

Ⅲ. 철도망 구축방안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하여 도내 전역이 철도로 연결되는 3 3의 철도망 구축으로 지역간 연계 개발을 촉진하고,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의 건설로 전국적 광역고속교통체계 구축하고, 수도권 서부와 아산만권간 산업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동서산업철도] 및 [보령~조치원철도], [서남선철도]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경부선(천안-조치원-대전), 호남선(대전-목포), 장항선(천안-장항) 등 기존 철도의 복선화 전철화를 하는 방법이 있다.

그림 2. 철도망 확충 구상도

열린 충남-봄 2006.4.20 2:24 PM 페이지119

표 2. 축별 철도망의 노선명 및 주요경유지

구 분	노 선 명	주 요 경 유 지
합 계	6개 노선	
남북축	서남 장항선	당진, 예산, 홍성, 보령, 서천
	호남고속철도	천안, 공주, 논산
	경 부 선	천안, 연기, 대전
동서축	동서산업선	태안, 서산, 당진, 아산, 천안
	보령-조치원철도	보령, 청양, 공주, 조치원
	금 강 선	서천, 부여, 논산

Ⅳ. 항만 구축방안

대중국 및 환황해권 교역을 지원할 교역 전진기지로서 대산항, 보령신항, 장군신항, 장항항, 당진항(아산항) 등 5개 무역항과 대천항, 비인항, 안흥항 등 3개 연안항을 확충하고, 보령신항의 대북 대중국 교역의 전진기지화 및 광역적 크루즈 여객항 기능을 확충하며, 이를 위하여 [보령~안면도]간 연육교를 건설하고, 중국행 정기여객선을 취항하는 것이다.

당진 대산항, 장군신항 등의 배후지역에 산업단지 개발 및 자유무역지대 지정하여 수도권항의 1차 보완기능을 수행하는 중국과의 산업교역 중심항으로 개발하고,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하여 지역경제의 거점화를 만들고, 항만은 수송 물류 정보망을 갖춘 제3세대형 종합물류기지로 개발하며, 항만과 배후지역간의 철도, 고속도로 등의 연계수송망 구축 및 컨테이너기지, 종합물류단지 등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림 3. 항만배치 구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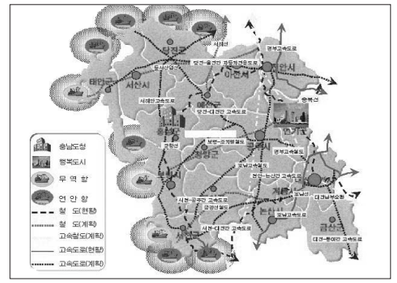

그림 4. 교통체계 구축방안 종합

Ⅴ. 결 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주 · 연기 지역 건설, 충남도청의 홍성 · 예산지역 이전지 결정 등 최근의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수행되는 정책사업들이 충남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교통망 체계를 구축할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충남도청의 홍성 · 예산 이전으로 충남도는 행정도시-공주-청양-홍성 · 예산의 중부내륙축과 천안-행정도시-대전-금산으로 연계되는 동부축의 위상과 개발전망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개발축을 실현시키기 위한 교통망 체계의 구축방안으로서 먼저, 광역교통망 차원에서 당진-울진간, 서천-영덕간 고속도로 등 국토의 동서간 연계성과 대천-서천간 고속화 도로, 태안반도의 고속교통망 접근성 제고와 국도 77호선의 연계성 제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망의 경우 호남고속철도의 충남도내 정차역이 입지하여야 하며, 일반철도의 경우 충청선 철도(보령-청양-공주-행정도시-조치원), 서해안 철도(야목-안중-예산)등의 건설과 장항선 개량 및 복선 전철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권역거점 및 지역항만의 확충으로 대중국 교역창구 역할을 강화하고 환황해권 교역의 전진기지 구축을 위하여 당진항 등 5개 무역항과 대천항 등 3개 연안항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내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많은 단위사업들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함으로, 이들 사업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비롯한 재원조달 방안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열린 충남-봄 2006.4.20 2:24 PM 페이지121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네트워크 구축방안

정환영 | 공주대학교 교수

정환영 교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도시의 전문화와 네트워킹을 위한 방안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발표논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전재한다.

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효과를 지역발전에 활용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 이념과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상을 염두에 두고 충청권이 스스로 국토정책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관점에서 지역개발과 도시정책을 추진해가야 한다.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충청권 주변지역이 상호 보완적이고 분업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충청권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광역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Ⅱ.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관련 법률도 제정될 예정이다. 이 때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위상, 범위와 명칭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현재 여야가 진행시키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이 때까지도 결말이 나지 않는다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 부여를 논하게 될 때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연기군과 공주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권역에 직접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 명칭 및 범위를 설정할 때 직접적인 당사자가 된다. 따라서 이 때 대응 가능한 논리를 미리 개발해 놓아야만 한다. 몇 가지 예상되는 대안으로, ①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예정지」와「주변지역」만을 가지고 특정시를 만드는 방안, ②연기군 및 공주시를 통합하여 특정시를 만드는 방안, ③광역권 전체를 특정시로 만드는 방안, ④기존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광역도시권을 설정하여 특정시를 만드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이 때 연기군 및 공주시 그리고 주변 지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①안으로 된다면 연기군의 많은 부분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편입되어 군세가 매우 약해지게 됨으로써 존립기반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럴 경우 천안시, 청원군, 공주시 등의 인접지역에 분산 편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②안으로 된다면 공주시와 같은 오랜 전통을 가진 도읍이 해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③안과 같이 된다면 상당히 큰 규모의 새로운 매머드 도시가 발생하게 된다. ④안의 경우는 가장 이상적일 수 있으나 주변 지역의 행정구역 개편에 영향을 준다는 면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Ⅲ. 광역계획권 관리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될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 도시로 하는 광역도시권이 새로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면 주변의 시, 읍·면급 도시지역의 기존 시가지에서 다가구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으로 무질서한 건축과 토지이용변화가 예상된다. 광역계획권내의 기존 도시지역에 대한 정비방향을 중심도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해 가는 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 주변지역과 같이 이용하거나 연계되는 광역 차원의 도시 시설로 도로 등의 교통시설, 상하수도 등의 공급처리시설, 자연공원, 유원지 등의 공원위락시설을 효과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완료 단계에 있거나 건설과정에서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 인근 도시 및 읍 면을 정비하거나 신시가지를 개발하여 개발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 신시가지개발은 광역도시계획에서 먼저 충분히 검토하여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에 입각하여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열린 충남-봄 2006.4.20 2:24 PM 페이지123

Ⅳ.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성 확보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도입하려고 하는 기능으로 광역유통, 대학·대학원, 문화·미디어, 중추행정, 첨단산업, 연구개발, 국제문화관광 등이 제안되고 있다. 주변지역에서는 이러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성 확보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어떠한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를 분석하고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주변지역의 이해 없이 진행되면 신도시 도입기능이 주변도시 기능과 상충되어 주변도시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저하될 수도 있다. 또한 적절한 규모의 기능이 설정되지 않으면 효율성 확보가 어렵거나 신도시로의 기능적 흡수로 인한 주변도시의 공동화가 야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지역 내에서 새로운 불균형 성장이 야기되고 특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 날 가능성이 높다.

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광역 중심상업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충청권 거점 및 국제교류 기능을 할 광역중심 상업업무지구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호텔, 고급백화점, 쇼핑몰 등 고급광역상권시설, 컨벤션센터 및 전시장 등 국제교류시설이 입주해야 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이러한 광역중심 상업지역에 대규모 상업시설이 입주할 경우 주변 지역의 상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하리라 보며 주변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업 환경을 가진 주변지역 특히 중소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상권에 흡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상업시설 규모는 주변지역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모로 하고, 주변지역 시장의 현대화와 전문화를 시급히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Ⅵ.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주변지역 대학의 참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 기능 중 교육, 연구 기능을 높이는 데에 주변지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우선 교육 및 연구 기능으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원을 유치하려는 데에 여러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바, 이에 주변지역의 대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인한 우수학생 유치는 연구 환경의 개선을 기대하기 곤란하며 오히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대학으로 우수 인력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제2의 강남」또는 교육 특구가 되어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고 50만 이상의 인구 집중이 일어 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주대학과 충남대학의 통합이 조기에 마무리 되어 통합대학 본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설치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된다. 이 때 대학 명칭도 행정중심복합도시 지명 또는 유사한 지명을 따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전문대학원 또한 통합대학에서 대학원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문대학원은 개방형 대학원을 지향하여 전국에서 우수한 교수진이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Ⅶ. 충청권내 중심 도시간 네트워크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충청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충청권내 중심도시간 기능 및 시설분담, 소도시와 군 지역의 인구감소와 기능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성 있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도시네트워크이론(City Network Theory)을 적용하여 도시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트워크이론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대도시는 시장규모가 크고 많은 인적 자원을 확보하여 성장에는 유리하지만 에너지의 낭비적 사용과 환경오염, 교통 혼잡 등의 집적 불경제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중규모 도시는 환경적 악영향이 낮고, 이동성이 높으며, 주민들에게 강한 소속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시장규모와 인적 자원공급의 한계로 고차적 기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규모 도시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중규모 도시의 규모와 중심성 취약이라는 본질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유사 규모 도시간 연결성을 강화하여 도시네트워크를 형성하면 대도시의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충청권 도시들의 도시네트워크를 위해서는 우선 중심도시간 기능 전문화전략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 중심도시들의 산업별 특성과 미

열린 충남-봄 2006.4.20 2:24 PM 페이지125

래의 전략산업을 감안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화기능을 선정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도시들 간에 경쟁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Ⅷ. 주변도시의 전문화와 네트워킹

주변지역의 전문화와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네트워킹은 자연·인문적 조건과 지역 특화 전략에 따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산업연구원과 충남전략산업기획단은 2004년 21세기 충남의 전략산업으로 전자·정보기기산업(첨단전자부품,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자동차, 메카트로닉스, 첨단운송장비, 정밀기기), 첨단문화산업(디지털콘텐츠, 정보통신서비스), 농·축산바이오(첨단작물, 첨단축산, 생물), 관광산업(생태체험, 건강·휴양)을 선정하여 추진하여 오고 있다.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은 수도권으로부터 분산되는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고, 수도권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인구와 산업을 부분적으로 유치하기에 최적의 위치이다. 이미 천안은 현재 충청권 북부지역의 산업, 교육중심지로서 수도권과 대전권을 연결하는 서해안 배후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충청권 도시와의 연계기능을 보다 강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주력산업인 금속기계업종 이외에도 충남도 주력 산업인 영상, 반도체, 정보통신업종을 적극 육성하여 산업구조를 첨단화·다원화시켜야 할 것이다.

공주시는 교육·문화 산업, 관광·레저 산업, 영상·애니메이션 산업, 전원형 주택 산업 등을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강을 활용한 수상 레저 산업을 개발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대전광역시민의 레저 공간으로 서비스 할 수도 있다.

계룡시는 국방 및 방위산업, 전원형 주택 산업을 전문화하고, 연기군은 물류산업, 중부권내륙화물기지, 신기술 첨단벤처산업, 오락·유흥 산업을 전문화 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광역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 곳에서 멀지 않은 부여군, 논산군, 금산군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화 방안이 필요하다. 부여는 백제역사 문화의 전통보전과 재현을 통한 문화관광산업, 청정농업을 전문화하고, 논산은 국방, 레저, 녹색관광을 전문화 할 필요가 있다. 금산은 국제인삼물류센타 등 인삼약초 관련 산업 및 청정농업, 산촌·전원형 주거, 산악형 관광 산업을 전문화 할 필요가 있다.

표 1. 주변지역 산업전문화 방안

도시명	전문화 산업	
행정중심복합도시	• 국가중추정치·행정 • 첨단기업 투자지원시설 • 문화산업 및 의료·복지	• 교육, 연구 산업 • 인쇄, 음향, 정보 산업
대전광역시	• 과학기술 및 연구(대학, 연구) • 첨단산업 및 금융	• 정치·행정(제3청사), 국방
청주시	• 전기·전자·통신관련 IT(산업) • 항공산업, 음식료업, 인쇄출판업(산업)	• 보건·의료·제약등 BT(산업) • 물류, 국제업무
천안시	• 영상,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보통신(산업)	
공주시	• 교육, 문화 산업 • 영상, 애니메이션 산업	• 관광·레저 산업 • 전원형 주택 산업
계룡시	• 국방, 방위산업	• 전원형 주택 산업
연기군	• 물류산업, 중부권내륙화물기지 • 오락·유흥 산업	• 신기술 첨단벤처산업

Ⅸ. 환경 및 네트워크 산업 공동 대응

금강 중류지역에 인구 50만명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면 금강 하천의 오염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고 하류 지역인 공주시, 부여군, 서천군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청댐 상수원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상수도 시설 용량을 늘리고 배수관을 확보하는 등 네트워크형 시설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쓰레기 처리장, 열병합 발전 등 지역발전소 건설, 도시가스, 전력 등의 문제 등도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

Ⅹ.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네트워킹을 위한 과제들

첫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주변지역의 연계체제 확립(지자체간 협약, 조례제정, 위원회, 협의체 구성, 관련 지자체 및 실과 전담 부서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등)하고, 둘째, 지역민의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계획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셋째, 새로운 주변도시 기능 분담사업 발굴(이주자 택지 개발 사업, 휴양·레저·스포츠·오락 산업, 웰빙·건강산업 등), 넷째, 제3차 충남 종합계획 수정, 마지막으로 각 시·군 도시계획 수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